

# 정부·업계 양돈불황 대책 부심

올 6월 돼지 400만두 육박 예상!  
법 제도 보완도 시급!

## 83년과 거의 같은 추세로 증식중

정부와 양돈업계가 양돈불황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모돈두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1월말 발표한 정기 가축 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의 모돈두수는 53만 6천두로 작년 6월 44만 4천두에 비해 무려 10만두(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육두수도 3백34만 7천두로 6월에 비해 41만 5천두(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모든 증가추세는 소규모일수록 심해 100두미만 사육농가의 경우 작년 6월이후 6개월동안 6만 1천두(30%) 증가되었고, 100~499두 규모는 8천두(21%), 500~4,999두 규모는 6천두(16%), 5천두 이상 대기업 농장도 5천두(12%)를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85년 하반기 이후 양돈경기가 계속 호황을 이루자 기존 양돈농가들의 시설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또 신규로 양돈업계에 뛰어들어 농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작년 6월 이후 6개월간 모돈이 매달 1만 5천두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난 83년 3월부터 9월까지 모돈이 증가했던 것과 같은 추세(이때도 매달 1만 5천두씩 모돈의 증가가 이루어짐)로서, 84년초에 급격한 돼지 가격 하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표 1)

당시 84년 초에는 돼지값이 두당 8만 2천원 선까지 떨어져 생산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같은 추세대로 나간다면, 올 6월 이후에 모돈은 60만두, 총 사육두수는 4백만두를 넘어서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불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추정한 모돈두수 60만두와 총 사육두수 4백만두는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두수 규모인 모돈 51만두와 총 사육두수 3백60만두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양돈불황 예방을 위해 양돈업 등록·허가업체에 감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2)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말 198개 업체 (허가업체 2, 등록업체 196)에 대해 1월 25일까지 초과사육분을 줄이라고 감축명령을 내리는 한편, 35개 허가업체에 대해서도 작년 11월말 보유모돈의 10%를 2월말까지 자율감축토록 촉구하

기도 했다. 농림수산부가 각 시·도를 통해 감축명령을 내린 두수는 모두 5,779두로서 1월 7일까지 감축하지 않은 업체는 중앙종축 등 64개 업체 1,464두로 밝혀졌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921두, 경남 339두, 충남 287두이다.

농림수산부는 1월 25일까지 감축명령을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달이내에 부과금

표 1. 사육두수 및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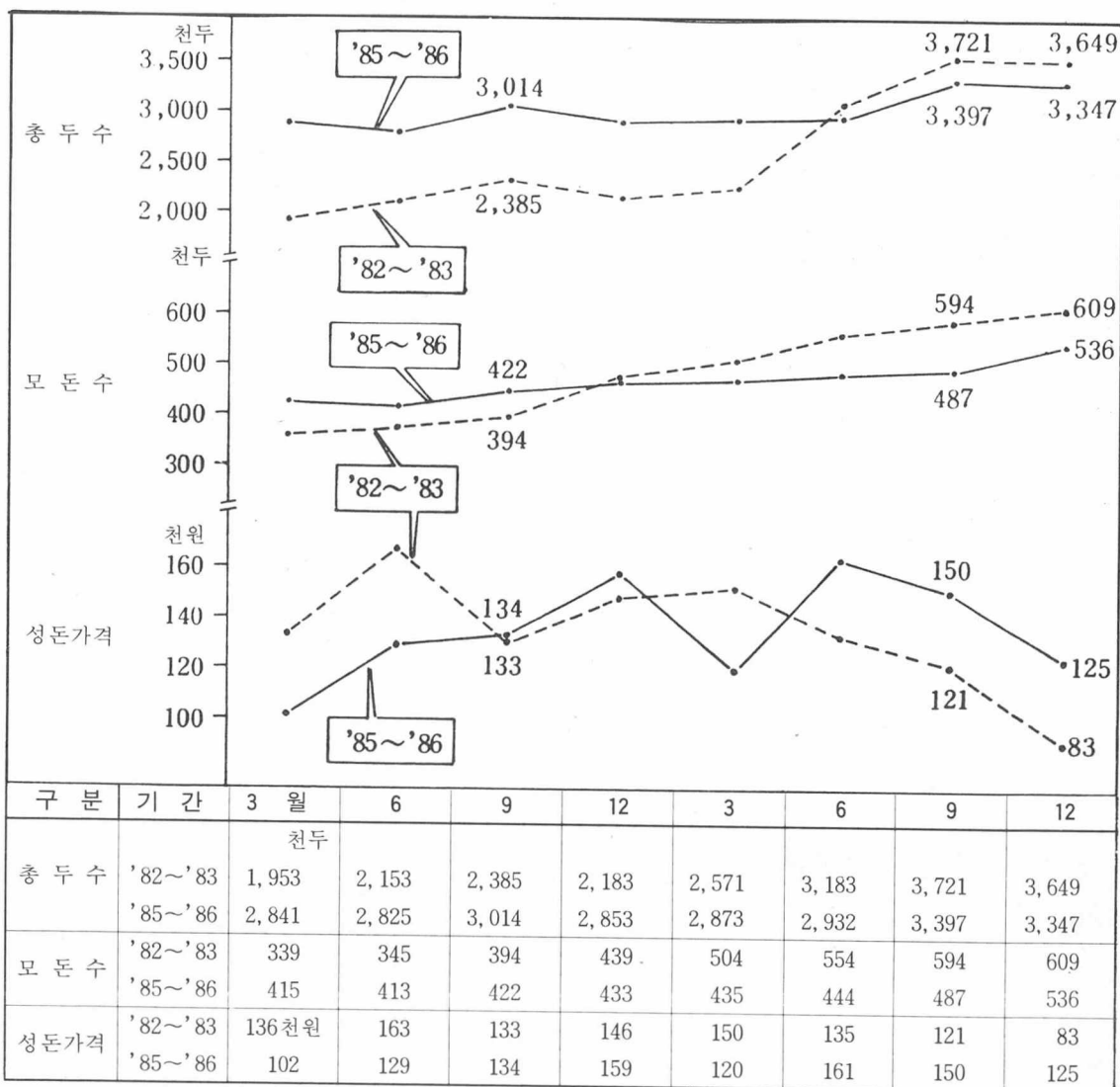


표 2. 양돈업 등록·허가업체 모돈감축 상황

(단위: 두)

| 구 분 |     | 등록·허가<br>상 황 | '85. 11. 25<br>현 재<br>초과업체(A) | '86. 11. 25<br>~12. 15<br>감 축 실 적 | '86. 12. 25<br>~'87. 1. 7<br>감 축 실 적 | 감 축 누 계<br>(B) | '87. 1. 7현재<br>초 과 업 체<br>(A - B) |
|-----|-----|--------------|-------------------------------|-----------------------------------|--------------------------------------|----------------|-----------------------------------|
| 등 록 | 개소  |              |                               |                                   |                                      |                |                                   |
|     | 업체수 | 635          | 196                           | 107                               | 26                                   | 133            | 63                                |
|     | 모돈수 | 66,227       | 5,679                         | 3,691                             | 607                                  | 4,298          | 1,381                             |
| 허 가 | 업체수 | 35           | 2                             | -                                 | 1                                    | 1              | 1                                 |
|     | 모돈수 | 36,674       | 100                           | -                                 | 17                                   | 17             | 83                                |
| 계   | 업체수 | 670          | 198                           | 107                               | 27                                   | 134            | 64                                |
|     | 모돈수 | 102,901      | 5,779                         | 3,691                             | 624                                  | 4,315          | 1,464                             |

(모돈 1두당 219,750원)을 부과하고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수산부는 미등록·무허가 양돈업체는 적발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돈사 신·증축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본회도 하반기 돼지 파동에 대비, 자율적인 생산조절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양돈불황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회는 작년 11월 전국 단위의 생산조절 결의대회와 12월의 각 도별 생산조절 결의대회를 통해 자율적인 모돈 10%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TV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조진형 부회장은 지난 1월 19일 KBS-TV와 MBC-TV에 출연, 양돈농가들에게 사육두수 조절을 호소한 바 있다.

### 모돈을 종돈으로 전환등록시 제재 방법 없어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돈불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 원인은 축산법을 악용

한 일부 대기업과 등록업체에서 모돈을 종돈으로 등록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실제 감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축산법에는 종축업에 대한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농장 등에서 모돈 감축대신 종돈으로 전환 사육할 경우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도 전체 양돈인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크다 하겠다.

### 사업장 분산 대기업 철저 조사해야

따라서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와같은 법제도를 보완해 업계일각에서 거론되는 소위「축산법으로 인해 전업규모만 손해본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허가업체를 조속히 파악·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계열화 사업농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란 것이 업계의 중평이다. 계열화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부업양돈농가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농가 소유 돼지의 위장분산이 될 때, 그로 인한 업계의 갈등은 크고 후유증 또한 클 것이다. <취재: 김동성>